

與 ‘尹 녹취록’, 野 ‘李 1심 선고’... 11월 위기설 ‘동시다발’

與,尹-명태군 씨 녹취록에 ‘휘청’ 대통령 국정 지지율 10%대로 추락
李, 선거법 위반 등 1심 선고 앞둔 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관련 재판 1심 선고가 있는 11월에 야당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군 씨가 소통하며 재보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부여당도 위기를 맞고 있어 정치권 전반이 대혼돈에 빠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25일엔 위증교사 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 출연

해 고인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

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나, 검찰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위증교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현직 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향후 피선거권이 박탈돼 21대 대선에서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갈 수 없다. 1심 선고 결과가 이 대표에게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명 씨 간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11월 위기설’에 정부여당도 휘말리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의 직접 사과 요구가 나오는 등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최근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0%대로 내려앉아 정부 출범 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한 상황이다. 1심 선고가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와도 민심이 정부여당에 등을 돌려 거꾸로 위기가 심화될 수 있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치원로들이 모인 상임고문단은 3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대통령실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

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전 오찬 회동에 나서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조기 설치하고 특별감찰관도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3일 회동에선 김건희 여사가 활동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지율 폭락의 대위기를 탈출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성찰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독소조항 등을 삭제한 김건희 특검법 여야 합의 등 김여사 문제에 대한 특단의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진정어린 사과 ▲국정기조를 대전환 및 인적쇄신을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野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

현직 대통령 불참 11년 만의 일
與 “정쟁 한 장면 연출 가능성” 옹호
野 “하고 싶은 일만 골라 하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리는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자리를 나서며 인사하는 모습. /뉴스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리는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것은 11년 만의 일이다. 여야는 3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4일부터 677조4000억원의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회 예산안 심사는 4일 시정연설부터 시작하는데, 윤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대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할 전망이다.

시정연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도 매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해왔다. 심지어 2016년 10월24일에 있었던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이 드

러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에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1일에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여당의 10·11 제·

보궐선거 패배 후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1시간 가량 오찬을 가진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시정연설 불참을 결정한 것은 최근 정국 상황과 관련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태군 씨 간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이어 야권에서는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나 ‘탄핵 소추’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여야의 극한 대결을 이유로 지난 9월22일 국회 개원식도 불참했다.

이에 여야는 3일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시정연설이 정쟁의 한 장면을 연출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에서 “아마 국무총리가 대독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 하겠다고 거리로 나서는 분위기에서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느냐. 정쟁의 한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여러 상황이 있으니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 시정연설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면서도 “시정연설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장외로 나가서 주장한 적은 없다”고 야권을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취임식 날 대통령의 임무를 다 하겠노라 선언했던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만 골라 하려는 것이냐”며 “후보 시절 기분이 내키지 않아 토론회를 쫓기더니 내키지 않으면 불출석하는 버릇은 고치기 어렵나 보다”라고 비난했다. /서예진 기자 syj@

입 장 문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 취소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입장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가 벌어졌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위법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종교탄압 웬 말인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금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눈이 멀어 국민을 둘로 나누고, 종교를 둘로 가르고, 결국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가?

우리 신천지예수교회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를 대관해 30일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을 개최하고자 했다. 국내의 수만 명의 수료생과 종교지도자들이 이미 입국해 행사 참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대규모 국제 행사였다. 그러나 경기관광공사는 대관 당일인 10월 29일 오전, 우리와는 단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적법한 대우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처사다. 이미 입국한 각국의 종교지도자들과 수료생들에게 우리는 무슨 설명을 해야하는가? 한류를 외치며 세계화를 강조하던 대한민국이 종교탄압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에 데모를 원하는 것인가?

우리는 모든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 7월 22일 대관 승인통보 후 10월 2일에는 대관비도 완납했다. 10월 16일에는 행사 규모, 배치도, 안전계획, 특수효과 불꽃 사용 등에 대한 실무 미팅을 진행했고, 경기관광공사는 행사의 모든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안전점검 심의도 완료했다. 특히 같은 날 경기도가 파주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는 대북 전달살포 차단을 위한 조치로 우리 행사와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사전 통보나 제재도 없었다. 더구나 10월 23일과 28일, 담당자들은 두 차례나 “대관 취소 계획이 없다”고 공식 확인까지 했다.

안정성 검토까지 완료된 행사를 특정 종교단체의 반대로 당일 취소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며, 국민을 둘로 나뉘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다. 더욱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북한 자국'이라는 허울뿐인 변명을 내세워 대관취소를

지시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다른 행사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특정 종교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위헌적 행위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신천지예수교회를 이 땅에서 몰아내려는 것인가? 특정 종교단체의 말 한마디에 허가했다가 취소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던 말인가? 우리는 이 나라의 당당한 국민이다.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왜 차별받아야 하는가?

이대로는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신천지예수교회 수십만 성도가 거리로 나서기를 원하는가? 신천지예수교회는 그동안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그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이제 우리의 권리와 정의를 위해 거리로 나갈 것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무시하고 차별해도 되는 2등 국민이 아니며, 이 땅에 2등 국민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이런 식의 차별과 탄압이 이 나라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는가? 착각하지말라.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국민에게 납득 가능한 대관 취소 결정 근거를 낱알이 밝히고 신천지예수교회 전 성도와 초청받은 국내외 귀빈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종교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수십만 명의 성도들과 거리로 나갈 것이다. 국제 인권단체들에 한국의 종교탄압 실태를 낱알이 고발하고, 가능한 민·형사적인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종교의 자유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신천지예수교회와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 11. 01.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일동